

당정청 “재난지원금 현재의 2배 수준 상향”

민주도당 상무위 20일 개최 확정

사망 1000만→2000만원 · 침수지원 100만→200만원 “현 상황은 감당 가능 재정 상황” 4차 추경 추후 판단

당정청은 12일 역대 최장기 장마로 인한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난지원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올려 현실화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예비비 등 현재 재정 상황으로도 대응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편성을 일단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수해 대책 관련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속하고 항구적인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며 “피해 지역의 주민

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청은 정부의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납부지방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신속히 진행하고 직·간접적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복구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조기 복구에 착수하고 피해 복구는 단순한 원상 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정청은 또 1995년 만들어진 이래로 증액이 없어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2배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망의 경우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 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 대응으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피해 지역과 주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고 유사 피해에 대한 근본적 예방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

부가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예산확보 관련 법안 처리 등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4차 추경 편성 여부는 결론이 보류됐다. 현재 남은 2조6000억원 가량의 예비비로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서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며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하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이용호 의원 “미성년 임대사업소득 증과해야”

2살배기 갓나아가가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갓나아가는 돌도 채 되지 않았던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총 229명으로 이들이 가진 주택 수는 412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은 11세 어린이로 총 19채를 등록했다.

3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 총 27명 중 70%를 넘는 19명이 서울 거주자이고 이중 단 4명을 제외한 15명은 강남 3구에 거주 중이다.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급증했다. 2014년 22명, 2016년 61명이었던 것이



2018년엔 세자릿수인 179명으로 급증했고 이후 2년 사이에 다시 50명이 더 늘었다.

또한 이 의원은 “2살 아기가 성년이 돼 미성년 임대사업자가 자연소멸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급이라도 사업소득에 대해 증과세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과 의원, 사무처 직원들이 12일 순창군 유등면의 하우송농가를 찾아 침수된 농작물을 뽑는 등 일손 돕기에 나섰다.

“1년 농사 망친 시름 조금이라도 덜고파”

도의회, 도내 폭우피해 복구 '구슬땀'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과 의원, 사무처 직원은 12일 순창과 남원, 진안 등 도내 폭우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활동을 벌였다.

송지용 의장과 최영일 부의장, 사무처 직원 50여명은 이날 오전 순창군 유등면의 하우송농가를 찾아 침수된 농작물을 뽑는 등 하우스를 정리했다.

이 농가는 들깨와 고추·블루베리 등을 재배했는데 기습폭우로 하우스가 모두 물에 잠겼다.

송 의장은 “지난 7일부터 순창지역에만 54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면서 “생활터전과 함께 1년 농사를 망친 도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전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면서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과 직원들도 각각 진안과 남원의 수해지역을 찾아 피해상황을 살피고 복구를 도왔다.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과 이한기·국주영은 의원, 상임위원회 직원들은 진안군 성수면과 진안읍의 인삼과 수박 재배농가를 찾아 피해상황을 둘러보고 수해를 입은 농작물을 수습했다.

김철수 위원장은 “수해 현장을 둘러보는데 마음이 아프다”면서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과 직원들도 전북도청 건설교통국 직원들과 함께 남원시 추천면 내삼마을에서 수해복구활동을 펼쳤다.

문건위는 침수된 주택에 밀려들어온 토사를 쓸어내고 가재도구 등을 정리했다.

이정린 위원장은 “기습폭우와 제방 유실로 인한 남원지역 피해가 막대하다”며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위해 최소한의 상무위원만 참석

잡정 연기 됐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상무위원회(정기대의원회 대체)가 다시 개최된다.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릴 예정이던 상무위원회(정기대의원회 대체)가 전북지역을 휩쓸어 버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확대되면서 행사를 잡정 연기했지만 오는 20일 목요일 오후 2시,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당초 예정돼 있던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합동 연설회는 전면 취소되고 대신 후보자들이 참석해서 인사말 등을 전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전북도당은 이번 행사를 최소한의 상무위원만 참석하는 규모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외부가 아닌 전북도당 회의실을 행사장으로 결정했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당초 예정된 날짜에 개최되는 상무위원회(정기대의원회 대체) 역시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행사장에 입장하려 했지만 다시 열리는 이번 행사 역시 축소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해를 입은 도민들의 안타까움이 전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전당대회 준비를 축소해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지도부 50여명은 12일 오전 남원시 금지면 일대에서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수해복구 작업에 동참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조직개편안 논의

운영위, 현안정책 간담회

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오)가 12일 오후 도의회 조직개편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현안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원 2~3명으로 구성된 만큼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과 겹치지 않도록 비회의 기간에 현안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도의회는 지난달 27일 제374회 임시회 폐회 이후 오는 9월 초 제375회 임시회 개회 때까지 지역별 주요 현안 파악과 의원 역량개발 등을 위한 기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새롭게 구성된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후반기 도의회가 보다 원만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관련 안건을 청취하고 심도있게 토론했다.

특히 이날 현안정책 간담회에서는 도의회 조직개편안과 의안 처리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도의회는 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입법정책담당관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의회 사무처장이 입법정책담당관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의원들은 효율성 등을 놓고 심도있게 토론했다.

또한 의원 발의 의안 처리방식 등에 대해서도 더 발전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토론했다.

운영위 위원들은 의원 발의 의안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숙고한 후 의정단에 최종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김대오 운영위원장은 “이번 현안정책 간담회를 통해 도의회가 조직 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해 스스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면서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상임위원회간 소통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집행부의 견제감시기능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靑 신임 국민소통수석 정만호 · 시민사회수석 윤창렬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비서관 후임으로 정만호(62)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내정했다. 또 김연명 사회수석의 후임으로는 윤창렬(53)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발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청와대 수석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신임 수석 내정자들은 오는 13일자로 임명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신임 정만호 소통수석 내정자와 관련 “국정 운영 관련한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정책 효과와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창렬 사회수석 내정자에 대해 강 대변인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수립, 추진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각각 진안과 남원의 수해지역을 찾아 피해상황을 살피고 복구를 도왔다.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과 이한기·국주영은 의원, 상임위원회 직원들은 진안군 성수면과 진안읍의 인삼과 수박 재배농가를 찾아 피해상황을 둘러보고 수해를 입은 농작물을 수습했다.

김철수 위원장은 “수해 현장을 둘러보는데 마음이 아프다”면서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과 직원들도 전북도청 건설교통국 직원들과 함께 남원시 추천면 내삼마을에서 수해복구활동을 펼쳤다. 문건위는 침수된 주택에 밀려들어온 토사를 쓸어내고 가재도구 등을 정리했다. 이정린 위원장은 “기습폭우와 제방 유실로 인한 남원지역 피해가 막대하다”며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